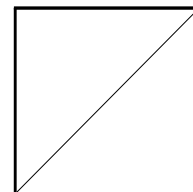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345 호
의 결 연 월 일	2023. 11. 29. (제 21차)

의  
결  
사  
항

농협은행(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김 주 현
제출 연월일	2023. 11. 29.

## 1. 의결주문

농협은행(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고,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내에 조치대상자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하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재조치 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

## 2. 제안이유

농협은행(주)에 대해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외국환거래법」상 은행의 확인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농협은행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점 업무의 일부정지 조치를 하고자 함

##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다. 관계부서 협의

- 제10차, 제12차, 제16차 제재심의위원회(2023.4.20., 5.9., 5.26.) 심의필
- 제17차, 제20차, 제21차 안전검토 소위원회(2023.9.21., 11.9., 11.23.) 심의필

<별지>

농협은행(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 1. 조치내용

### □ 기관에 대한 조치

- 신당동지점 : 업무의 일부정지\* 2.6개월

\* 정지대상업무 : 외국환 지급 신규업무(이미 일부에 대한 지급수령이 개시된 거래로서 조치 효력 발생 전 확인된 한도 내에서 취급하는 지급은 제외)

- 충무로지점 등 3개 영업소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관련하여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므로 농협은행에 대해 과징금 18,761,079원\* 부과 건의

\* 각 영업소별 과징금 합계액이며, 영업소별 위반사실 및 과징금 금액은 다음과 같음

지점	위반사실	과징금 금액
충무로지점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	11,635,936원
양재남지점	신고대상 및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	6,906,673원
의왕시지부	신고대상 및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	218,470원

- 조치사유 : 외국환거래법 위반

- 법적근거 :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제6항

「외국환거래법」 제10조(업무상의 의무) 제1항

「외국환거래법」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제1항 제5호의2, 제7호, 제5항

「외국환거래법」 제12조의2(과징금) 제1항, 제2항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7조(업무 수행에 관한 기준) 제4호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2조(인가의 취소 등), <별표2>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별표3>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지급 및 수령) 제1항, 제2항, 제4항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지급등의 절차) 제1항

## 2. 조치사유

### 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 (1) 사전 송금업무 취급시 신고 대상 여부 확인의무 위반

□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2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거주자가 계약건당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하여 송금방식에 의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항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당해 지급등이 신고등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농협은행(주) 양재남지점 등 2개 영업소는 2021.1.21. ~ 2021.4.14. 기간 중 거주자인 (주)○○○○○○○○○○로부터 수입대금 지급(5건, 미화 1,995,267불)을 요청받아 처리하면서

－ (주)○○○○○○○○○○이 건당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사전송금방식으로 수출입거래 상대방에게 송금 요청한 건에 대해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하여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

#### 확인의무를 위반한 사전송금방식 지급거래 현황

(단위 : 건, 미달러)

영업소	송금업체	송금방식	송금기간	거래내역	
				건수	금액
양재남지점	(주)○○○○○○○○○○	사전송금방식 통관수입대금 지급	2021.3.29.~ 2021.4.14.	4	1,960,268
의왕시지부	(주)○○○○○○○○○○	사전송금방식 통관수입대금 지급	2021.1.21.	1	34,999
합계				5	1,995,267

## (2) 지급등의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1항 및 제4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외국환거래 취급 시 지급등을 하려는 자로부터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이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농협은행(주) 신당동지점 등 4개 영업소는 2021.1.21.~2022.5.13. 기간 중 (주)◆◆◆◆ 등 3개사로부터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수입거래대금 지급(122건, 미화 243,776,250불)을 요청받아 이를 처리하면서,

-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지급하거나,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기재된 거래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중대한 형식상 하자 또는 내용상 오류가 있어 지급사유를 적정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외화송금업무를 취급한 사실이 있음\*

\* 아래 <표>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유형별 건수 및 금액’ 참조

###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유형별 건수 및 금액

(단위: 건, 미달러)

위반유형(형식상 하자 또는 내용상 오류)	거래내역	
	건수	금액
(1) 증빙서류 미징구	1	27,499
(2) 증빙서류상 금액보다 초과 금액 지급	1	3,010,591
(3) 수출입거래 계약서와 달리 미래의 거래를 선반영한 인보이스(송품장) 등에 의거하여 지급	74	212,286,780
(4) 인보이스(송품장)에 발행인의 서명 또는 인감 날인이 없어 서류의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에도 지급	46	28,451,379
합계	122	243,776,250

< 붙임 >

## 관계 법규

### □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업무상의 의무)**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및 외국환중개회사(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라 한다)는 그 고객과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를 할 때에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영업소를 포함한다)의 업무를 제한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5의2. 제8조 제6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과징금)**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업무를 제한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그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겨 결제하는 경우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2.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자

##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업무 수행에 관한 기준)** 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4. 그 밖에 외국환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를 것

**제22조(인가의 취소 등)**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등록·인가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2조 관련)

### 1. 일반기준

기획재정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100의 50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가 등록 또는 인가 취소 대상인 경우(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 취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위반행위가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한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로 처분을 갈음할 수 있다.

#### 가. 가중 사유

- 1) 1년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각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총업무정지기간을 계산하되,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총업무정지기간을 기준으로 가중 처분할 수 있다.
-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3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나. 감경 사유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외환시장 및 금융기관 이용자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해당 외국환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4) 위반 사유를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 2. 개별기준

해당 행위	해당 법조문	처분기준
바.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 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1항 제5호의2	업무정지 2개월
차.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7호	업무정지 2개월

**제2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별표 3]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기획재정부장관은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에 다음 각 목의 부과 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가. 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20

나. 업무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40

다. 업무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라. 업무정지 4개월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70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나목1) 또는 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최근 1년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1억원 이상인 경우



**제30조(지급 또는 수령 방법의 신고)** ② 법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지급 및 수령)** ① 외국환은행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지급 또는 수령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4장에서 정한 지급등의 절차에 따라 거래하여야 한다.

②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등에 대해서는 당해 지급등이 법·영 및 이 규정에 의한 신고등의 대상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지급신청서 및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령의 경우 확인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외국환은행의 장은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지급등의 증빙서류 및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제4-2조(지급등의 절차)** ①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이하 이 장에서 “지급등의 증빙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요하지 않는 거래로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자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거주자의 지급등 절차예외)** ①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외국인 거주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  
가. 연간 누계금액이 미화 5만불 이내(제7-2조제8호의 거래에 따른 지급금액을 포함한다)인 경우  
나. 연간 누계금액이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으로서 당해 거래의 내용과 금액을 서류를 통해 외국환은행의 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수령. 다만,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수령사유를 확인받아야 한다.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당해 거래의 내용을 설명하고 제2-1조의 2의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8조(신고 등)** ① 거주자가 수출입대금의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1호 다목 및 제2호 나목 본문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후신고를 할 수 있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입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나. 계약잔당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하여 송금방식에 의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따른 산업설비에 대한 미화 5백만불이내의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금융시장분석과	은행검사2국
연 락 처	2100-2906	3145-7208